

국무조정실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734-8797 / FAX 723-1966
조사심의관실 과장 홍현선 서기관 김성환

문서번호 국무심평 11260-206

시행일자 1999. 8. 23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기획관리실장

취급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조정관	유재하	기획심의관	
심의관	박기종		
과장	홍현선		
★기안	김성환		협조

제 목 「부패방지종합대책」 시달(국무총리지시 제1999 - 19 호)

1. 정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확정·시달하게 되었습니다.

2.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해 부패방지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본 대책의 시행을 계기로 전 공무원이 부패추방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대책과 관련, 제도개선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부처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추진계획은 9.10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기 바라며,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본 대책을 시달하기 바람)

첨부 : 1. 「부패방지종합대책」 1부.
2. 후속 조치과제 1부.
3. 후속 추진계획 수립양식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01~04, 07 제외)

후속 조치과제 목록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제명	주요 조치 사항 (예시)	주관 부처 (관련 부처)
(1)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추진기획단 신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2)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법안마련 당정협의, 대통령령 마련	국무조정실
(3)기관별 감사부서장 직위 개방	감사부서장 개방직 임명 지침 시행	중앙인사위원회
(4)취약분야의 자체감찰반 운영	부처별 자체감찰반 운영지침 시달	국무조정실
(5)공무원행동강령 제정·시행	행동강령 확정 및 시행지침 작성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6)공직자·보수 개선	공무원보수 개선계획 수립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7)학교교육분야 반부패 교육강화	반부패교육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
(8)사회교육분야 반부패 교육강화	반부패교육 강화방안 마련	문화관광부
(9)공무원교육분야 반부패 교육강화	반부패교육 강화방안 마련	행정자치부
(10)부패추방 상업광고 실시	계획수립	국무조정실,
(11)반부패 프로그램 제작·방영	계획수립	국정홍보처
(12)시민의 고발정신 함양	부정부패 고발·신고 모니터 운영	국무조정실
(13)부패추방 국민운동 전개	민간과의 부패추방운동 협력방안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14)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 및 홍보 방안	국무조정실
(15)퇴직자의 취업제한요건 강화	관련법령 개정 및 지침 작성	행정자치부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 제 명	주 요 조 치 사 항 (예시)	주관 부처 (관련 부처)
(16) 퇴직자의 취업제한 사후관리 강화	관련규정 개정 및 지침 작성	행정자치부
(17) 회계제도의 선진화 및 기업경영 감시강화	관련 제도 개선·실행계획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18) 기업집단의 경영 투명화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시행 - 접대비 집행 투명화 방안	관련제도개선 및 지침 작성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19) 기업의 반부패노력 지원	세부시행지침 마련	재정경제부
(20) 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법무부
(21) 고발보상제도 강화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국무조정실
(22)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
(23)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
(24) 공공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
(25) 단속실명제 확대	세부 시행지침 수립	국무조정실
(2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강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세부 시행규칙 마련	행정자치부
(27)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동법 시행령 제정	법무부·재정경제부
(28) 뇌물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관련법령 개선 세부 시행지침 수립	법무부
(29) 부패행위로 면직된 자의 취업제한 강화 - 민간기업, 공직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
(30) 뇌물제공자의 처벌강화	관련법령 개정·정비	법무부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 제 명	주 요 조 치 사 항 (예시)	주관 부처 (관련 부처)
(31) 건축관련 불분명한 규정정비	관련 법규정 개정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32) 건축인허가 부과조건 투명화	관련 법에 금지규정 신설 객관적인 부과기준 마련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33) 건축 인허가 전담부서 통합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시행 통합기구설치를 위한 인력예산 조정	"
(34) 일괄준공검사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
(35) 단독주택신고대상 확대	관련 법령 개정	"
(36) 건축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행지침 마련	"
(37) 건축 업무처리지침의 메뉴얼화	시행지침 마련 메뉴얼 작성	"
(38) 건축위원회 등 시민단체 참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
(39) 건축 단속실명제 도입	운용지침 마련	"
(40) 건설발주내역 및 예산공개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
(41) 수의계약 요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재정경제부
(42) 제한경쟁요건 심의 강화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재정경제부
(43) 건설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관련법령 개정 및 추진기구 설치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44) 설계변경심의에 시민참여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45) 건설사업추진현황 공개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 제 명	주 요 조 치 사 항 (예시)	주관 부처 (관련 부처)
(46) 건설 위원회 위원선정을 풀(Pool)제로 운영	시행계획 수립·시행	건설교통부
(47) 책임감리공사 연락관제 개선	관련법령개정 및 시행지침 마련	〃
(48) 건설관련 금품제공자 제재강화	관련법령 개정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
(49) 건설 부당행위자 처벌강화	관련 법령 개정	〃
(50) 특별감리검수단 운영	관련 법령 개정 및 기구설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51) 부실공사, 건설부패 고발자 보상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52) 건설관련 국민감사청구제 도입	관련법령 개정 및 운용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53) 건설부패 특별감찰반 운영	운용계획 수립·시행	건설교통부
(54) 건설 신성서약제 도입	운영지침 마련·시행	〃
(55) 적발위주 교통단속 개선	실행지침 마련·시행	경찰청
(56)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관련법령 개정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시행	〃
(57) 교통사고현장조사결과 공개	관련 지침 개정·시행	〃
(58) 교통 고발보상강화	시행방안 마련 및 관련 규칙 개정	〃
(59) 물피교통사고형사면책범위 확대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및 관련지침 개정	〃 (법무부)
(60) 파출소의 단계적 감축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및 인력· 예산 조정	경찰청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 제 명	주 요 조 치 사 항 (예시)	주관 부처 (관련 부처)
(61)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개선	단속지침 개정·시행	경찰청
(62) 경찰행정시민평가단 운영	경찰유관단체를 폐지계획 수립·시행 경찰행정시민평가단 운영계획수립시행	"
(63) 경찰전보기준의 명확화	객관·합리적인 전보기준 마련·시행 (의무적 순환전보제 도입)	"
(64) 경찰심사승진 지침 개정	심사승진지침을 개정, 지휘관의 재량 범위 축소	"
(65) 경찰관 근속승진제 확대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행정자치부)
(66) 외근 3교대근무제 확대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행정자치부)
(67) 경찰업무 활동비 등 현실화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행정자치부)
(68)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 개정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추진	재정부, 국세청
(69) 불명확한 세법규정 정비	관련 정비계획 수립 불명확한 법령·규칙관련 법령 개선	"
(70) 통관업무 표준화	관련업무처리지침 마련·시행	재정부, 관세청
(71) 수입요건 대상법령 정비	관계 법령 정비	"
(72) 우편·CD·인터넷신고 확대	세무자료 제출 및 세무신고 관련규정 개정 및 운영시스템 개선	국세청
(73) 서류없는 통관시스템	수출입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관세청, 통상산업부
(74) 부패 행위자 취업제한	세무사법등 관련법령 개선	국세청
(75)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책임 강화	세금과오납 부과자에 대한 적발 강화	"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제명	주요조치사항 (예시)	주관부처 (관련부처)
(76)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국세청
(77)세무서단위 심의회에 시민 참여 확대	관련규정 개정법 각종위원회 정비	“
(78)탈세고발 보상강화	관련규정 제·개정 및 세무운영지침 마련·시행	“
(79)세무조직 기능별 개편	관련부서 조직개편 추진	국세청 (재경부, 행자부)
(80)단계적으로 과세특례·간이 과세 폐지	부가가치법등 관련법령 개정	“
(81)세무조사 인력 확충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
(82)단계적 표준소득율제 폐지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재경부, 국세청
(83)하수종말처리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현실화	관계규정 개정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84)폐수배출시설 변경절차 간 소화(신고제)	관계규정 개정	환경부
(85)객관적 기준에 의한 단속대 상 선정	세부운영계획 마련·시행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86)환경단속 실명제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
(87)점검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인터넷 공개	인터넷 공개에 관한 세부운영 지침 마련·시행	“
(88)시민단체와 합동단속	세부운영계획 마련·시행	“
(89)환경영향평가등 주민참여	관계규정 개정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 시행	“
(90)환경오염고발 보상강화	관계규정 개정	“

※ “주요조치사항”은 예시이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작성시 대책보고서를 참조 요망

과제명	주요조치사항 (예시)	주관부처 (관련부처)
(91)환경홈닥터 운영	세부운영계획 마련·시행	환경부
(92)식품품질규제기준을 안전기준으로 통합	관련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식약청
(93)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제로 전환	관계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94)일반음식점 대중공연 허용	관계법령 개정	“
(95)업소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식품의약품청 (지방자치단체)
(96)단란주점에 대한 경찰단속원칙적 금지	「경찰관풍속단속지침」등 관련규정 개정	경찰청
(97)허가·단속 및 행정처분결과인터넷 공개	운영지침 마련·시행	식품의약품청 (지방자치단체)
(98)시민단체와 합동단속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
(99)1399 주민신고 보상제 활성화	관련 규정 개정	“
(100)단란주점의 업종전환 유도 (점진적 폐지)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보건복지부 (국세청, 자치단체)

<별첨 3-1 : 총괄표>

「부패방지종합대책」후속추진계획

(○ ○ 부)

☐ 총 ○건

과제 번호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명	추진일정	담당부서	담당자

※ 작성 · 제출시 유의사항

- 추진일정은 구체적인 날짜 또는 “○월 상 · 중 · 하순”으로 기입
- 한글 14 point로 작성
- Disket 제출 또는 천리안(ID : JS25)으로 File 송부

<별첨 3-2 : 과제별 세부계획>

* 과제당 1매씩 작성

과제 번호		주관부처		관련부처	
과 제 명					
현황 및 대책내용					
세부과제별 조치계획 (※ 일정포함)					
소요예산					

腐敗防止 綜合對策

‘99. 8

國 務 調 整 室

< 目 次 >

I. 推進 背景 및 經緯	1
II. 腐敗 實態 및 原因	2
III. 腐敗剔抉을 爲한 課題	4
IV. 目標 및 推進戰略	6
V. 對策方案	9
1. 腐敗統制基盤 構築	9
2. 公職者 意識 및 處遇 改善	12
3. 國民意識 改革	14
4. 腐敗를 誘發하는 文化・環境 改善	16
5. 腐敗에 대한 摘發・處罰 強化	17
6. 腐敗脆弱分野 行政改革	19
VI. 措置計劃	21

※ 添附資料：腐敗脆弱分野 70大 行政改革課題

I. 推進 背景 및 經緯

◇ 背 景

- 최근 腐敗剔抉에 대한 國民的 要求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 지속적 經濟成長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腐敗의 根絶이 중요
- 부패에 대한 國際的 規制強化에 대비할 必要性 擡頭
(’99.2, OECD 腐敗防止協約 發效)

◇ 經 緯

- ‘98. 6월 世界銀行(World Bank)과 協定하여 腐敗防止對策 추진을 위한 資金(345천불) 確保
- ‘98.11 國務總理主宰 關係長官會議에서 「腐敗防止綜合對策」을 樹立・推進기로 결정
- ‘98. 12월 稅務, 警察, 建設・建築, 腐敗統制體系 改善對策 등의 課題를 선정하여 專門研究機關에 研究用役 의뢰
 - 用役結果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諮問會議, 세미나(4.12~13), 關係部處 및 각계 대표와의 協議 등을 거쳐 대책 수립

II. 腐敗 實態 및 原因

◇ 腐敗 實態

- 腐敗公職者에 대한 司法處理件數는 70년대이후 90년대초까지 완만한 減少勢를 보이다가 90年代 초반이후 司正活動의 강화에 따라 크게 增加

※ 사법처리건수 : 1,881명('72) → 1,072명('81) → 933명('91) → 3,986명('96) → 3,153명('97) → 3,722명('98)

- 각종 輿論調查結果 국민들은 우리의 부패수준이 深刻한 것으로 인식
 - '99.3(정신문화연구원), '99.5(리서치 & 리서치), '99.7(한국갤럽)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응답자의 93%, 91% 및 95%가 부패의 深刻性 인정
- 「國民의 政府」에 들어서도 부패문제는 크게 改善되고 있지 않다는 輿論
 - 과거 정부에 비해 감소 24.6%, 변화없음 56.1%, 증가 16.3% ('99.7 한국갤럽)

◇ 우리의 腐敗水準에 대한 國際機關의 評價

- 한국의 腐敗水準은 국제적으로 보면 中下位圈 水準이며 競爭相對國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보다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비고
'98년 TI지수	7위	16위	25위	29위	43위	85국중
'99년 PERC지수	1위	2위	3위	5위	8위	12국중

※ TI : 국제투명성기구, PERC : 홍콩의 국가위험도 조사기관

◇ 腐敗原因

○ 行政・制度的 要因

- 非現實的이거나 過度한 規制, 不분명한 行政處分 基準
- 處理遲延과 急行料를 유발하는 複雜한 行政處理節次
- 金品誘惑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낮은 공무원 報酬水準

○ 文化・環境的 要因

- 政・官・經 癒着慣行
- 낙하산 인사, 前官禮遇의 공직풍토, 請託慣行
- 불합리한 接待・寸志・慶弔事 文化

○ 公務員 및 國民意識 要因

- 公私區分이 미흡한 공무원의 公職倫理意識
- 國民의 利己主義 및 血緣・地緣・學緣 重視風土

—<韓國腐敗의 特性>—

○ 과거 政府主導의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각종 認・許可등의 規制가 濫發되어 부패를 유발
- 특정기업에 대해 特惠를 주고 反對給付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權力型 腐敗의 慣行化

○ 家父長的 權威主義, 緣故主義, 派閥主義, 溫情主義 등 社會文化的 요인들이 사회 전반에 부패를 조장

Ⅲ. 腐敗剔抉을 위한 課題

◇ 外國의 腐敗剔抉 成功事例

- 外國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腐敗剔抉의 성공조건
 - ① 最高指導者의 강력한 腐敗剔抉意志
 - ② 國民의 적극적인 支持・參與
 - ③ 腐敗防止法 制定 및 獨立的인 腐敗統制機構 설치
 - ④ 腐敗防止 制度改善, 敎育・弘報 등 腐敗防止施策의 強力한 推進
 - ⑤ 과감한 公職者 處遇改善

〈主要國의 腐敗統制關聯 法律 및 機構〉

구분	근거법률	통제기구	담당인력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1960)	부패행위조사국 (1960)	80명
홍콩	뇌물방지령 (1970)	廉政公署(ICAC) (1974)	1,300명
호주	부패방지위원회법 (1989)	부패방지독립위원회 (1989)	128명

※ '98년도 부패통제관련 예산 : 홍콩 1,100억원, 호주 100억원

◇ 과거 정부의 腐敗剔抉 노력에 대한 評價

- '80년대 이후 歷代 政府들의 腐敗剔抉노력은 不正非理 連累者에 대한 事後處罰 爲主로 이루어져 근본적인 대책 미흡
- 腐敗追放에 대한 政治的 意志의 不足으로 腐敗防止法의 制定, 부패를 誘發하는 제도의 개선 등 부패방지시책의 體系的・持續的 推進 未洽

◇ 腐敗剔抉을 위한 우리의 課題

- 大統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腐敗剔抉에 대한 강력한 意志를 가지고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각종 規制改革과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통해 腐敗問題解決을 위해 努力
- 국민들도 '97년 外換危機를 불러들인 主犯중의 하나가 부패라고 인식하고 이번만큼은 부패문제를 根源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特段의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要求
- 지금이 腐敗剔抉의 好機로서 과거 시책의 문제점과 외국의 成功事例에 비추어 정부가 優先的으로 추진해야 할 課題는
 - 腐敗防止法을 제정하고 腐敗防止機構를 新設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制度改善과 國民意識 改善을 적극 추진
 - 公職者 處遇改善 등을 위해 과감하게 投資하는 것임
- ※ 여론조사결과 ('99.7 한국갤럽), 부패척결의 과제로서 ①국민의식개혁(36.9%), ②공직자 처우개선(28.3%), ③성역없는 사정(20.5%), ④관련법·제도의 개선(13.8%) 등을 들고 있음

IV. 目標 및 推進戰略

◇ 目 標

■ 깨끗하고 信賴받는 政府具現

■ 透明하고 公正한 社會實現

■ 國家競爭力 提高

⇒ 21C 선진국 진입을 위한 基盤 構築

(TI지수 현재 43위에서 2003년 20위권)

◇ 基本方向

○ 處罰爲主의 事後統制보다는 事前豫防에 力點

○ 부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綜合的·體系의 접근

- 行政制度, 環境, 機構, 國民意識, 事後統制 등에 대한 總體的 改革 추진

○ 國民의 신뢰확보를 위해 實踐可能的한 代案 摸索

◇ 推進戰略

○ 腐敗脆弱分野의 行政改革을 優先的으로 推進

- 腐敗問題가 심한 세무, 건축, 건설, 위생, 환경, 경찰 등 6개분야에 대한 行政改革을 우선적으로 추진

○ 腐敗防止 인프라 構築

-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腐敗防止基本法 제정
- 부패방지정책 수립·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民間中心의 腐敗防止機構 設置

○ 부패추방을 위한 市民參與 擴大

- 부패에 대한 國民의 監視·告發機能 강화
- 各種 委員會에 市民團體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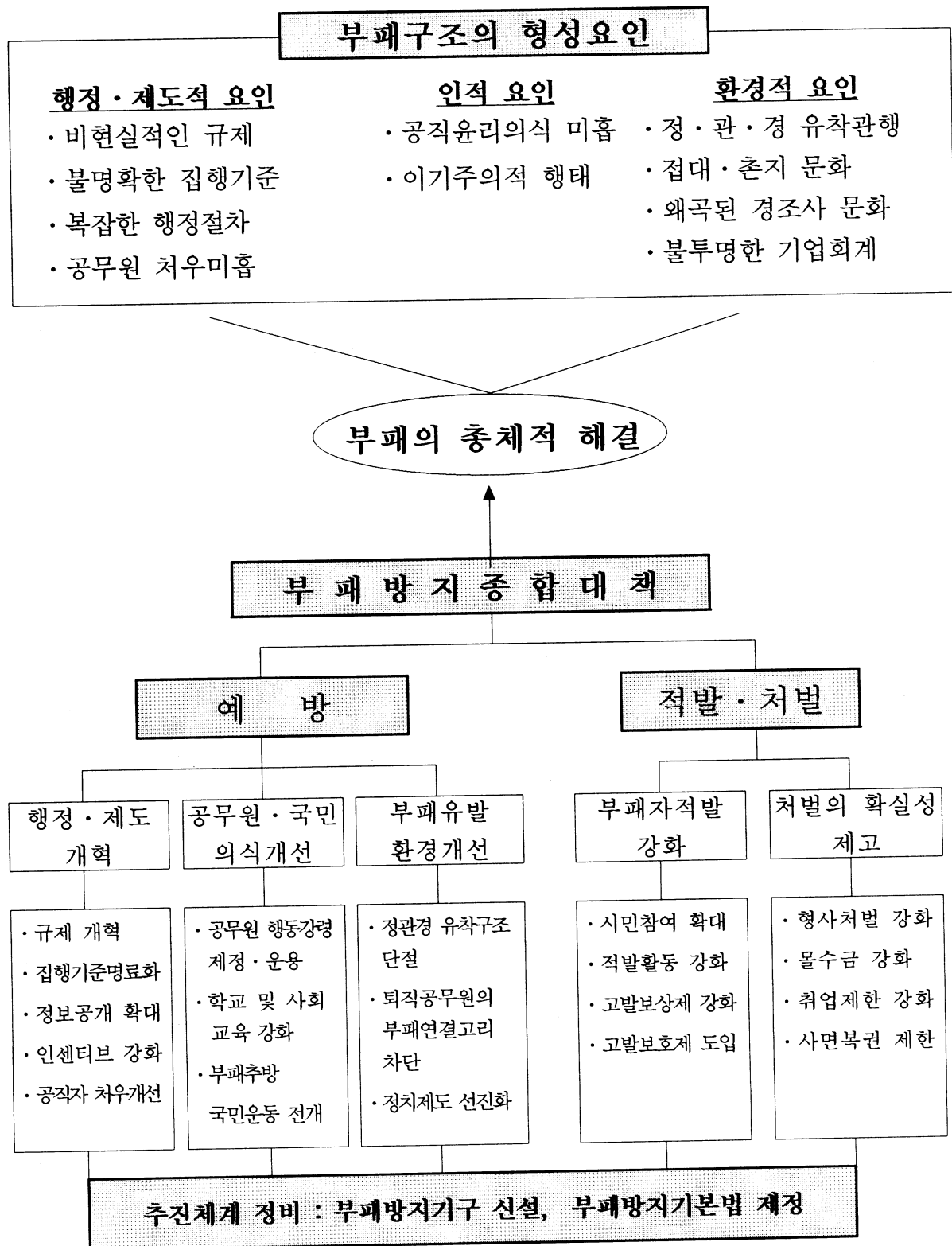
○ 부패추방을 위한 汎國民的 雰圍氣 造成

-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對內外 弘報 강화
- 民間主導의 腐敗追放運動 전개

○ 腐敗防止施策의 段階的 推進

- 1단계로 금년말까지 腐敗防止綜合對策 수립, 反腐敗特別委員會 설치, 각종 법령 개정 등 腐敗防止推進基盤 構築
- 2단계로 내년부터 교육·병무·조달 등 腐敗脆弱分野에 대한 行政改革과 民間部門의 부패방지대책 및 國民意識改革 並行 推進

◇ 接近體系



V. 對策方案

1. 腐敗統制基盤 構築

◇ 反腐敗特別委員會 設置

- 企業, 市民團體, 國民 모두 參與下에 부패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民間中心의 위원회 신설
- 所屬・性格 : 大統領 所屬 審議・諮問委員會
- 委員 構成 : 민간위원장 1인포함 민간위원 15인 이내
(국무조정실장 포함)
- 行政支援機構 : 腐敗防止企劃團 (위원회 소속)
 - ※ 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
- 主要機能
 - 腐敗防止政策의 樹立・審議・勸告
 - 各급 行政機關의 腐敗防止業務 推進狀況 평가
 - 부패추방을 위한 敎育・弘報計劃 樹立・施行
 - 시민단체의 反腐敗活動 및 反腐敗 國際協力 支援
 - 부패방지정책 수립을 위한 實態調査 및 資料蒐集
 - 內部告發 接受 (고발내용 확인, 관계기관 移牒, 처리결과 확인)
- 推進方案
 - 부패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순수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운영
 - 추후 기본법 제정시 심의・권고기능을 갖는 위원회 설치

◇ 腐敗防止基本法の 早速 制定

○ 基本方向

- 부패방지를 위한 基本的인 事項과 새로운 制度 중심으로 규정
- 腐敗豫防・監視 強化 및 腐敗追放을 위한 國民參與 확대

○ 主要内容

- 腐敗防止를 위한 정부・기업・국민의 義務
- 공직윤리 및 公務員 行動綱領의 제정근거
- 부패방지를 위한 意識改革, 教育・弘報
- 부패방지機構의 設置 및 運營
- 市民감사관 및 시민감사 청구제도의 도입
- 부패방지를 위한 市民團體와의 協力
- 부패행위 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 등

○ 推進方案

- 현재 國會繫留中인 腐敗防止基本法案은 摘發・處罰爲主로 되어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教育・홍보, 시민참여, 부패방지 기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
- 또한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個別法에 규정된 사항을 統合・規定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체계가 복잡
- 黨政協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 **既存制度**가 未洽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개정·보완**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자금세탁금지 →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계류중)
 - 부패자금의 몰수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

◇ 自體 腐敗統制機能의 活性化

- 자체 감사부서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 변호사, 회계사, 의약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를 계약직으로 임명 (임기 3년)
 - 감사부서장에 게도 독자적인 **懲戒要求權**을 부여하고 감사부서 직원의 **전보제한기간**을 연장 (2년 → 3년)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自體監察 強化**
 - 부처별 특별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기구를 확대하여 지방 또는 산하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기운영 : 국세청, 경찰청, 건교부 등)

2. 公職者 意識 및 處遇 改善

◇ 公務員行動綱領 制定・施行

○ 目 的

- 공직자로서 職業倫理를 確立하고 깨끗한 公職風土造成을 위하여 公・私生活에 있어서 지켜야 할 行動準則을 제시

○ 主要內容

① 공직자가 지켜야 할 基本姿勢

- 성실한 직무 수행
- 公私關係 구분(公用物の 私的利用 금지등)
- 건전생활 영위(호화시설・업소이용 자제)

② 癒着 防止를 위한 行動基準

- 寸志・餞別金, 響應을 받는 행위 금지
- 일정액 이상의 膳物을 받는 행위 금지
- 건전한 慶弔事 풍토조성에 솔선 (축조의금 접수제한 등)

③ 公正한 勤務姿勢

- 利權介入 및 幹旋・請託 금지
- 정당, 국회의원 後援會 加入 또는 後援金 寄附 금지

○ 推進方案

-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大統領令으로 制定
- 「公職者 10대 遵守事項」반영
- 자율적준수사항과 의무적준수사항으로 구분하여, 의무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등 행정처벌
- ※ 향후에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확정할 예정

◇ 公職者 報酬 改善

報酬實態 및 問題點

- 역대 정부의 公務員報酬 現實化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는 민간 및 국영기업체의 보수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98년말 현재 民間企業의 87%, 大企業의 70% 수준

- 최근 IMF관리체제 이후 '98, '99년 2년 연속 報酬削減 등으로 中下位公職者의 生活苦는 더욱 加重

⇒ 공직자의 생활안정과 자긍심고취를 통한 부패방지를 위해 民間水準의 報酬 現實化 時急

- 향후 5년 이내에 民間企業의 報酬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되도록 공무원 보수의 段階的 引上 推進

-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公務員 報酬現實化 5個年 計劃」을 수립·시행

- 民間企業의 賃金上昇率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수결정 시스템을 개선

- 연도초에 일정수준을 인상하고 연도중 상반기 민간기업 임금인상율을 반영하되

- 보수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수조정 豫備費에 편성하는 방안 강구

※ 향후 보수개선은 공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체계개편과 병행 추진

3. 國民意識 改革

教育・弘報의 必要性

-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궁극적으로 腐敗親和的인 文化・意識의 轉換이 매우 중요

※ 여론조사결과('99.7 한국갤럽), 부패차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식개혁(응답자의 37%)을 들고 있음

◇ 反腐敗 學校・社會 教育實施

- 초・중・고등 교과서에 腐敗의 社會的 弊害 등 실천적 내용을 포함시켜 청소년의 反腐敗意識 涵養

※ 교과과정 개편이전이라 하더라도 보조교재 제작・활용

- 一般市民의 反腐敗教育을 위해서 문화교실, 주부대학 등 각종 社會教育機關을 적극 활용

◇ 弘報活動 強化

- 반부패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효과가 높은 “商業廣告”의 적극 활용
 - 부패추방을 위한 “反腐敗廣告”를 TV와 라디오의 視聽率이 높은 시간대에 集中的으로 放映

※ 홍콩의 경우 홍보비용으로 매년 400억원 정도를 투자

- 국민의식개선 관련 “公益性 프로그램” 製作・放映
 - TV프로에 腐敗追放관련 드라마 제작・방영
 - 인기 연예프로나 오락프로에 관련코너를 신설하여 재미있고 흥미있게 전달 (예: 이경규가 간다)

○ 다양한 敎育弘報資料 製作・活用

-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부패방지대책을 內・外國人에게 弘報, 國民告發 接受 및 意見收斂
- 지하철광고, 옥외광고, 국정신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홍보

◇ 健全한 市民告發精神 涵養

- 고발자에게 포상, 감사장 수여, 세무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고발처리결과를 반드시 고발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신뢰 제고
- 부정부패고발신고 모니터 위촉・활용

※ TV, 지하철 등의 광고에 시민의 고발을 유도하는 광고포함

◇ 腐敗追放 國民運動 展開

- 민간 腐敗告發센타 運營 및 腐敗追放行事 支援
- 企業倫理綱領制定 등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운동 동참 및 각 경제단체별 自淨 運動 유도
- 言論機關, 市民團體 등과 합동으로 분야별 부패방지 세미나, 公聽會, 討論會를 연례적으로 개최

◇ 反腐敗 國際協力 強化

-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國際會議 적극 참석 및 國際機構 (TI, OECD, IBRD)에 대한 弘報活動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99.9, 마닐라), TI('99.10, 남아공)가 주관하는 반부패국제회의의 참석 등
- 2000. 10월 부패방지 “국제세미나” 개최 추진

4. 腐敗를 誘發하는 文化・環境 改善

◇ 退職者の 腐敗連結고리 遮斷을 위한 就業制限要件 強化

- 취업제한대상업무 판단기준을 퇴직전 2년간 本人擔當業務에서 퇴직전 3년간 本人所屬部署 담당업무로 확대
- 就業制限對象業體를 퇴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主要協會에까지 확대(98년말 협회수 : 6천여개)
- 취업제한대상업체 확대 : 현행 資本金 100억원 또는 賣出額 300억원 → 資本金 50억원 또는 賣出額 150억원
(이 경우 대상업체가 2,800개에서 7,000개 이상으로 증가)
- 就業者에 대한 관리 강화
 - 취업승인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취업후 부패연결 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실의 지도・점검 강화

◇ 企業部門의 透明性 提高

- 會計制度의 先進化 및 企業經營 監視制度 強化
 - 會計基準 적용의 객관성・일관성 제고
 - 社外理事 확대, 사외이사・감사 임명시 少額株主 참여 강화
- 企業經營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집단 結合財務諸表 시행의 차질없는 추진, 接待費 인정기준 강화
- 기업의 腐敗遮斷努力에 대한 협조・지원 확대
(企業倫理綱領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政官經 유착구조 斷絶 및 政治先進化

- 현행 고비용 정치제도를 低費用制度로 개혁(국회 및 정치권)

5. 腐敗에 대한 摘發・處罰 強化

◇ 告發者 保護制度 導入 및 告發補償制度 強化

- 고발자・고발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告發節次・告發者保護 규정등 신설 (부패방지기본법)
- 腐敗行爲, 豫算不正, 不法行爲 告發者에 대하여 補償金 지급 (정부 수입금의 5-15%)

◇ 市民의 監視・告發機能 強化

- 市民監査官 제도 및 시민의 監査請求制 도입
 - 시민감사관을 임명하여 다수관련 대형민원・부패의혹 분야 등에 대한 監査를 促求하거나 주요 監査活動에 직접 參與
 - * 서울시의 경우 현재 2명의 非常勤 市民監査官을 任命하여 주민의혹분야, 고충민원, 다수민원에 대하여 直接 監査
 - 일정수(1천명, 시군은 5백명) 이상의 시민이 監査機關에 감사를 要求하고 감사기관은 一定期間內에 義務的으로 監査
- 각종 公共委員會 委員에 市民團體 등 민간단체가 推薦하는 專門家를 參與 (예: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

◇ 腐敗者 摘發을 위한 制度 改善

-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團束實名制 운영 강화 및 확대
 - 현장단속 · 점검 · 감독시 현장출입목적 · 시간 · 점검내용 · 점검자 등을 기록 (환경 · 위생 → 전 행정분야)
- 公職者 財産登録 및 審査 強化
 - 연간 총 1천만원 이상의 수입증감(보수 제외)에 대해서도 그 內譯 申告
 - 증가된 재산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不誠實 申告者로 징계
- 자금세탁 방지법(정부안 국회 계류중)의 조속한 제정

◇ 腐敗公職者에 대한 處罰 強化

- 金品授受者에 대한 刑事處罰을 強化
 -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기소율 및 실행율 제고
- 腐敗行爲로 免職된 者에 대한 就業制限
 - 退職前 업무와 관련된 기업 · 단체에의 就業: 免職後 5년 이내 禁止
 - 公職 再就業: 면직후 15년 또는 형집행 종료후 10년 이내 禁止
 - * 영국은 부패로 인한 면직후 5年 以內 公職 再就業 금지
-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
 - 단, 뇌물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 * 현행: 5천만원이상 수뢰자 10년이상 징역, 제공자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6. 腐敗脆弱分野 行政改革

◇ 背 景

- 부패발생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패문제가 심한 세무, 건축, 건설, 위생, 환경, 경찰 등 6개분야에 대한 行政制度改革(案) 마련
- 조세연구원, 한국주택산업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 ('99.1~'99.5)
-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문가·학계·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완료

◇ 主要 改善內容

- 과도한 규제의 철폐 및 規制의 合理化
 - 建築 認·許可등 事業活動과 직접 관련된 규제, 現場訪問과 관련된 규제,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整備
 -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규제내용과 그 基準을 透明化하여 行政執行基準을 明確化
- 民願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情報公開를 擴大
 - 우편, FAX, CD, 인터넷 등을 통한 民願處理를 확대하여 대민접촉과정의 부패를 차단하고 국민불편을 해소
(세무신고, 건축·환경·위생분야 인허가 민원 등)

- 非公開對象情報를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비공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예산명세서, 분기별 사업집행계획 등 사업자·시민의 관심사항 공개)

- 주요 인·허가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행정 분야별 업무처리지침을 메뉴얼화하여 열람토록 함

○ 指導團束의 透明化를 통해 부패소지 縮小

- 지도·단속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合同團束 強化
(세무조사, 건축, 환경, 위생분야 불법행위 점검 등)

○ 公正한 競爭秩序를 확립하여 政·官·經 癒着을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 隨意契約 및 競爭制限 要件을 엄격하게 制限
- 入札秩序 違反者에 대한 處罰 強化 (공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 向後 措置計劃

- '99년 9월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

○ '99년말까지 각 부처 추진 완료

- 하반기에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分野別·機關別 腐敗指數를 測定하여 그 결과를 機關評價에 反映

VI. 措置計劃

과 제 명	조 치 사 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대책추진기구 설치	○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 부패방지기획단 설치	'99. 9 '99. 9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각종 법령 제 · 개정	○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 공무원표준행동강령 제정 ○ 제도개혁관련 법령 개정	'99 하반기 '99 하반기 '99 하반기	국무조정실(법무부) 국무조정실(행자부) 각 부처
취약분야 행정제도 개선	○ 건축, 건설, 환경, 위생, 경찰, 세무분야 등 6개분야 에 대한 절차간소화, 집행 기준 명확화등 추진	'99.9~12	각 부처 - 총 70개 과제
반부패 · 교육 홍보 실시	○ 반부패 정부정책 홍보 ○ 반부패 학교교육 및 공무원교육 실시 ○ 반부패 교육홍보자료 제작 ○ 반부패 시민운동 전개	'99. 9 2000. 1 '99 하반기 '99 하반기	국정홍보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국무 조정실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 수립 · 추진	'99. 8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추진실태점검 및 부패실태 조사	○ 부패지수측정 ○ 추진실태 점검	'99. 10 '99. 12	국무조정실
관련예산확보	○ '99년예비비 : 1,396백만원 ○ 2000년 예산 : 6,942백만원	'99 하반기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腐敗脆弱分野 70大 行政改革課題

- 건 축 분 야 (9개과제)
- 건 설 분 야 (15개과제)
- 세 무 분 야 (15개과제)
- 경 찰 분 야 (13개과제)
- 환 경 분 야 (9개과제)
- 식품위생분야 (9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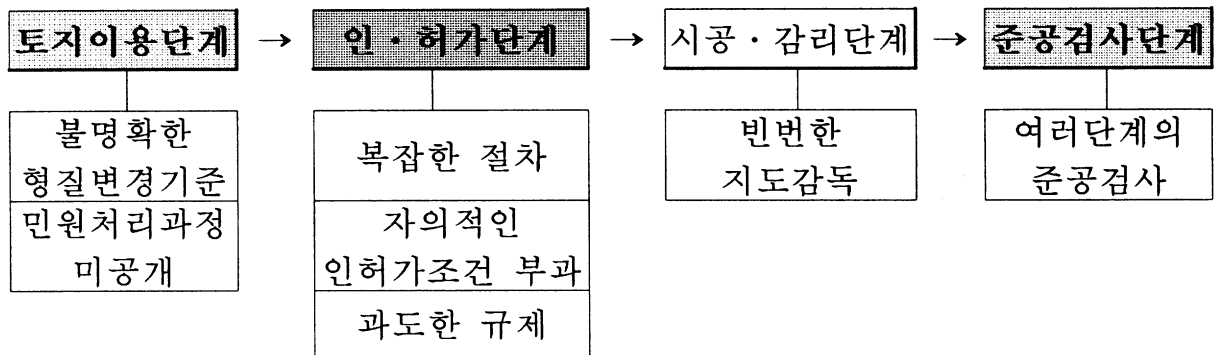
國 務 調 整 室

6개취약분야 개선과제 총괄표

분야	집행기준명확화	행정절차간소화	지도단속투명화	정보공개	시민감시·고발강화	기타 제도개선	계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부과조건 투명화 불분명한 규정 정비 (장기적으로 Negative Lists System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전담부서통합 단독주택신고대상확대 (100㎡→330㎡이하) 일괄준공검사제 도입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실명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 인터넷에 공개 업무처리 지침의 메뉴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위원회 등에 시민단체 참여 		9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리공사 연관관계도 개선 부당행위자 처벌강화 금품제공사 제재강화 특별감리점수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내역 및 예산공개 사업추진 현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심의 시민참여 고발자보상제 도입 국민감사청구제 도입 위원회 위원 선정을 Pool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요건 강화 제한경쟁 심의강화 특별감찰반 운영 신성서약제 실시 	15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세액공제 확대 불명확한 세법규정 정비 통관업무 표준화 수입요건 대상범령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CD·인터넷신고 확대 서류없는 통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자 취업제한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세정보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단위 심의회에 시민참여 의무화 탈세고발 보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조직 기능별 개편 세무조사인력확충 단계적 표준소득율제 폐지 단계적으로 과세특례·간이과세 폐지 	15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피교통사고 형사면책 범위 확대 (80만원→200만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발위주단속개선 무인단속장비 확대 풍속업소 임의단속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현장조사결과 당사자에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행정 시민평가단 운영 * 경찰유관단체 폐지 교통법규위반 시민고발 및 사고신고 보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출소 단계적 감축 전보기준의 명확화 심사승진지침 개정 외근 3교대근무제 활동비 등 현실화 근속승진제 확대 환경흡달터 운영 	13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종말처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배출시설 변경절차 간소화 (신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기준에 의한 단속대상 선정 환경단속 실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 인터넷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환경영향평가등 주민참여 환경오염고발 보상강화 		9
식품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품질규제기준을 안전기준으로 통합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제로 전환 일반음식점 대중공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소단속·점검실명제 단란주점에 대한 경찰단속 원칙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단속 및 행정처분결과 인터넷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1399 주민신고보상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란주점의 업종전환 유도 (점진적 폐지) 	9
계	7	11	15	7	14	16	70

建築分野

가. 腐敗實態 및 原因



- 아파트 등 대형건축관련 부패는 認·許可, 竣工檢査, 土地利用단계에서 주로 발생
 - 설문조사 결과('99.1) 건축단계별로 보통 100~500만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하고 농지나 산림 형질변경과정에서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
- 부패발생원인은 관련규정이 不明確하고 절차가 複雜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濫用이 가능하기 때문
 -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불명확한 규정을 有利하게 적용하거나(55.6%), 迅速한 처리를 위해서라고(36.5%) 응답

<不明確한 規定事例>

- ① 주변과 조화, 적정한 휴게공간 확보, 색상 등을 고려하여 一般建築物을 審議(서울시 건축심의기준)
- ②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적정한 면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農地轉用許可를 審査(농지법시행령제38조)

- 법령에 根據가 없거나 基準이 客觀的이지 못하여 임의로 부과하는 許可條件도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음

- * 조건 부과율(조건이 부과된 사업/총사업) : 78%
- * 사업당 조건수 : 평균 6.3건 ('94~'98 실태분석결과)

< 事 例 >

- ① 주변외곽도로에 가로등 설치, 놀이터에 CCTV 설치
- ② 주변도로 전면재포장, 아파트 진입로에 육교설치
- ③ 쓰레기 보관시설 50세대당 1조설치(법 100세대당 1조)
- ④ 민원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공사중지

나. 改善對策

◇ 裁量縮小를 위하여 不分明한 규정을 明確하게 整備

-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조례·규칙 등의 不明確한 규정을 透明하게 개정
 - * 건축법, 농지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 이하 규정과 서울·고양시 건축조례에서 불투명한 조항이 50개나 조사되었음
- 行政處分에 대한 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細部執行基準을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明確하게 규정
 - <例示> 공동주택사업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배분기준 마련
- 장기적으로는 “禁止되는 行爲”만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Negative Lists System**으로 전환

◇ 請託防止를 위한 認·許可 부과조건 透明化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條件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
- 법률에 條件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등 下位規定에 부과대상·기준등을 明確하게 규정

◇ 急行料를 遮斷하기 위하여 建築申告制 擴大

- 建築申告對象範圍(현행 도시·준도시지역 100m²이하)를 330m² 이하로 擴大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금품수수 소지를 차단
 -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하여 建築士設計義務는 존치

◇ 迅速·公正한 民願處理를 위해 民願節次 統合 및 簡素化

- 각과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인·허가관련 부서를 건축법에 규정된 專擔部署로 統合하여 준공검사 등을 一括處理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對民接觸 기회를 縮小
 - * 김포시는 '98. 10월 허가과를 신설하여 토지·산림·건축등 7개 인허가업무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 * 광명시는 '98. 10월 도시국·건설교통국 등에 국별 민원처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민원을 일괄처리

◇ 市民의 參與 擴大를 통한 公正한 委員會 運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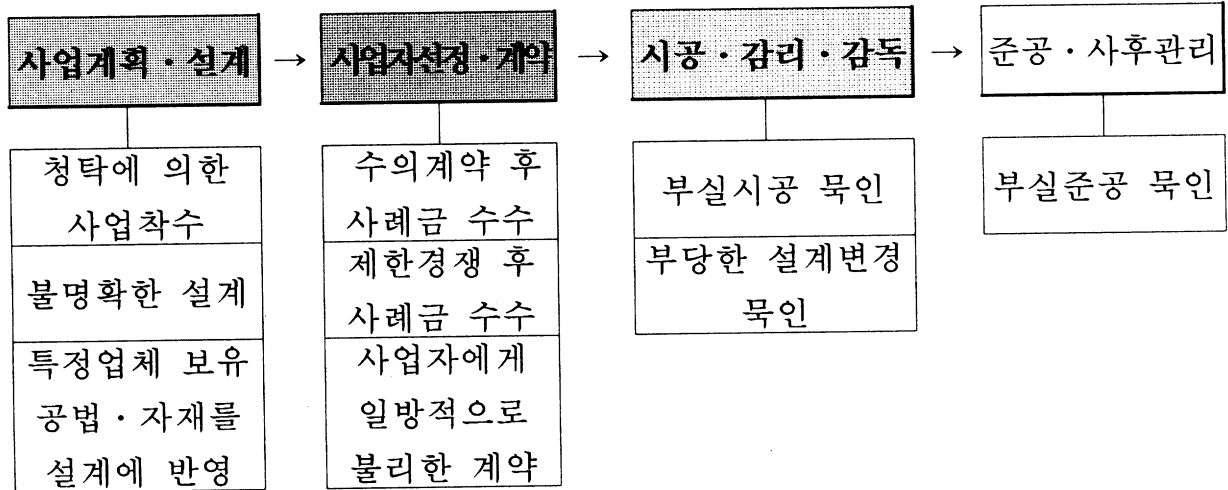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관련 주요 審議會에 市民團體 등이 推薦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

◇ 透明性 提高를 위해 民願處理過程 및 업무메뉴얼 公開

- 주요 認·許可 處理過程과 結果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불신을 제거
 - * 서울시는 '99.4부터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 관련법규,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자 처리현황 등
- 관련규정을 민원인이 쉽게 理解할수 있도록 認·許可 등 건축 단계별로 메뉴얼화된 業務處理指針을 조속히 마련 公開

建設分野

가. 腐敗實態 및 原因



○ 건설부패는 事業計劃·設計, 事業者選定·契約, 施工監理 등에서 주로 발생

* 단계별 부패실태(중앙일보 건설부패 보도내용분석, '89~'98) : 사업 계획 및 설계 37%, 사업자선정·계약 31%, 시공감리 27%, 준공 5%

- 事業計劃·設計段階 : 사업자와癒着되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特定事業者 보유의 공법을 설계에 반영

* (事例)

① 육교를 충분히 설치하여 더 이상 가설할 필요가 없어지자 농촌지역에도 육교를 설치(인천시, 광주시)

② 매년 반복되는 시군의 보도블럭 교체공사

- 入札·契約段階 : 隨意契約, 制限競爭方法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와癒着

- 契約變更・施工段階 :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不利한 契約을 체결한 후 請託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거나 유착되어 不當한 設計變更 및 不實工事を 默認

*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不利한 契約條項 事例)

- ① 내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질상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② 일부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미국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여건을 마련 해주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조항까지 명시

- 부패발생의 주요 原因은 사업확정 및 사업자 선정시 공무원의 過多한 裁量, 不明確한 法令 및 不當한 契約內容 때문임

* 불명확한 회계법령에 대한 質疑件數('98년) : 4,074건

- 또한, 건설업체에 채용된 前職公務員이 부패연결고리를 하고 不透明한 建設會計가 비자금 조달창구가 되고 있음

나. 改善對策

◇ 公正競爭을 促進하기 위해 隨意契約과 制限競爭要件 強化

- 분기별 發注計劃(물량, 예산액, 개략적인 발주시기 등)을 인터넷 등에 公開하여 다수의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
- 隨意契約 사유를 嚴格하게 적용하여 가능한한 競爭入札 실시
 - 동일현장 공사 및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강화

- 隨意契約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금액(3천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제출기회를 특정사업자에 限定하지 말고 일반에 開放
 - 사업자가 見積書を 제출하는 경우 拒否할 수 없도록 하며 最適價格을 제출한 사업자를 계약자로 선정
- 100억원(지방 10억원) 이상의 工事に 대해서는 制限競争要件, 事前審査基準, 適格業體 審査基準 등의 적정성 검토 강화
 -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推薦하는 專門家を 포함시킨 심의회 (가칭 계약심의회)를 설치하고 동 심의회의 審議를 거치도록 함

◇ 不當한 入札・契約 등에 대한 救濟方案 強化

- 계약관련 규정을 違反한 公務員에 대한 行政處罰 강화
- 계약체결후 設計變更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調整申請이 있는 경우 일정한 期限內(30일)에 처리하도록 明示
- 입찰・계약과정의 不當行爲에 대한 조정기구 신설(현행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契約分爭調整委員會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 主要工事의 事業計劃樹立・變更過程 등에 市民參與 擴大

-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한 事業着手 또는 중대한 設計變更시 市民代表를 참여시킴
 - 대상사업 예시) 총사업비 500억원(시군은 10억원) 이상 공사, 심사평가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업 등
-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住民請求시 事業內譯 공개
 - 시행자, 감독관, 예산, 사업시행이유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공개하여 不實工事 및 豫算浪費를 감시하도록 함

- 建設技術審議委員 選定對象을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등 국내전체 專門家(약3,000명)로 확대하여 Pool제로 운영하고, 당해 審議委員을 무작위 추천선정함으로써 事業者와 審議委員간의 癒着을 防止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97년) : 중앙 226건, 서울 300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건교부(중앙), 시·도(지방),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 등 총 111개

◇ 責任監理者 및 腐敗誘發者에 대한 責任 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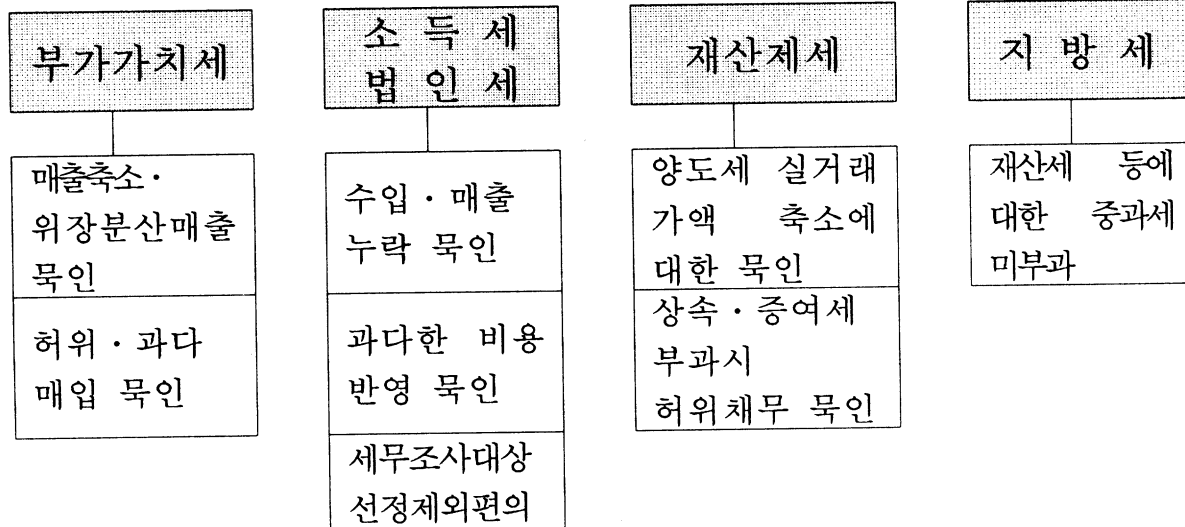
- 책임감리대상공사에 대한 擔當公務員(연락관) 지정제도 개선
 - 공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지 말고 직원중에서 無作為로 選定
 - 발주자와 책임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 ※ 지하철공사 현장에 책임감리단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공사지도감독 기관에서 연간 100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
-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외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特別監理檢受團을 구성하여 주요 건설현장의 감리실태를 不時에 點檢
- 金品提供者·機關에 대하여 공공기관과의 去來制限을 강화(1년→3년) 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마련
- 건설교통부내에 特別監察班을 구성하여 지방청 및 산하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

◇ 國民監査 請求制 및 告發者 補償制度 導入 등

- 腐敗行爲, 不實施工, 豫算不正使用行爲 등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國民이 監査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함
 - 고발시 고발로 인한 정부수입(과징금, 몰수금 등)의 일정을 (5%~ 15%, 최고한도 10억원)을 보상
- 각종 공사 入札·契約時 神聖 誓約制 도입

稅務分野

가. 腐敗實態와 原因



○ 세무부패는 그동안 電算化, 申告納付 擴大 등을 통해 납세자와의 대면접촉기회를 축소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腐敗가 높은 水準

- 附加價値稅, 所得稅 관련 매출축소·매입확대 등 목인
- 讓渡價額 축소, 相續稅 부과시 허위채무 목인 등

○ 비리발생의 주요원인은 去來內譯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法令 또는 事實判斷 基準이 불명확하여 세금부과과정에 세무공무원의 主觀的인 판단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

- * 전체개인사업자 중 기장신고자 비율 39.6%('97년 기준)
- * 민간소비지출중 신용카드이용 비율 16.9%('97년 기준)
- * '92~'93년동안 이루어진 심사청구 인용결정사례에 대한 감사원 분석결과, 세금과다부과건 중 76.9%가 세무공무원의 법령해석 잘못으로 드러남

- 또한, 不透明한 稅務調査 및 便宜的인 課稅賦課慣行 등이 납세자로 하여금 稅務公務員과 癒着하도록 만드는 요인
 - ‘98년 국세청 징계통계에 의거하면 세무공무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명목의 금품수수가 49.6%를 점유
 - 전체 개인사업자의 60.4%가 납세자의 실제소득과 관계없이 “標準所得率”에 의해 과세되고 있음

나. 改善對策

◇ 納稅者와 稅務公務員의 接觸을 遮斷하도록 稅務行政의 基本틀을 轉換

- 국세청 조직을 稅目別 組織에서 機能別 組織으로 개편
- 地域擔當制 폐지 및 課稅資料 처리건수 축소(연간 700만건 → 200만건)를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稅務干涉 차단
 - 讓渡所得稅(년간 145만건 정도)를 申告納付制度로 전환
- 우편, FAX, PC통신, CD, 인터넷 등을 통한 稅務資料 제출 및 稅務申告 확대

◇ 稅務調査 機能의 強化 및 客觀性·透明性 提高

- 地域擔當制 폐지와 課稅資料 처리에서 절감된 인력으로 納稅 서비스 및 稅務調査 기능을 대폭 強化
 - 납세서비스 : 776명(5%) → 3,392명(20%) * 납세지원과 신설
 - 세무조사 : 2,583명(15%) → 4,982명(30%) * 지방청 조사국 8개 증설

- 課稅情報 인프라를 구축하여 稅務調査를 科學化하고 陰性脫漏 所得者에 대한 課稅를 強化
 - 공공기관 보유 과세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집중·관리
 - 國稅統合電算網(TIS)을 개인별 과세정보 평생관리 시스템으로 발전
 - 전산자료에 의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의 방법, 범위, 기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여 調査公務員의 權限濫用 防止

◇ 去來內譯의 透明化와 根據課稅基盤 確立으로 裁量 縮小

- 향후 일정기간 동안(5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控除를 확대
 - 음식, 숙박 등 現金中心去來業種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액의 附加價値稅 세액공제비율 상향 조정(1%→2%)
 - 勤勞所得者에 대해서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초과액의 10%(상한 300만원)를 소득공제
- 부가가치세 課稅特例者(113만명) 및 簡易課稅者(54만명)는 조세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 폐지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강구
- 標準所得率 제도는 기장 확대, 카드사용 확대 등에 따른 거래 투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가며 폐지
- 기타 不明確한 法令·規則을 투명하게 정비
 - (裁量的 판단이 큰 事例) 국세청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지침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점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동 규모 미만의 주점업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민단체 등 民間團體가 推薦하는 專門家を 세무서 단위의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에 포함시켜 運營의 公正性 제고

◇ 脫稅者・腐敗者에 대한 摘發 및 處罰 強化

- 조세범의 형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세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租稅犯處罰法의 실효성을 제고
 - '91~'98 연평균 조세범 처벌 실적 : 24건
- 告發補償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벌금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결과 一定額(1천만원) 이상을 포탈세액으로 징수시 徵收額의 일정율(5-15%, 상한 1억원)을 보상해줄 수 있도록 개선
- 부패관련 解任以上の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5년간 稅務士 開業 및 稅務法人・稅務士事業所에의 취업을 제한
- 세금을 잘못 부과한 자에 대한 評價를 강화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부과횟포를 방지하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고
 - '96~'97년 국세심판소의 용인율(부당부과건/신청건) : 35% 초과

◇ 通關節次의 情報化・簡素化를 통해 關稅行政의 不條理 根絶

- 輸出入業務의 電算化를 통해 부조리 가능성을 원천 봉쇄
 - 수출입업체가 세관에 가지 않는 서류없는(Paperless) 통관시스템 시행('99.7부터 10%를 대상으로 시행후 지속적으로 확대)
 - 전산시스템을 이용, 통관진행사항을 업체에 실시간대로 제공
- 통관절차상 規制撤廢 및 透明性 提高
 - 통관단계의 要件確認對象 축소(국민보건·사회안전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 및 수출입관련기관(30개)과 전산망으로 연계하여 요건 확인
 - 수출입업무 標準化 및 標準處理時間制 도입
(일반통관 4시간, Paperless 2시간, UN제시 4시간)

警察分野

가. 腐敗實態 및 原因

교통단속 및 사고조사	방범활동	인사관리	수사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실적인 단속규정 · 적발위주 단속 · 비공개적인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근무여건 · 파출소와 관내업소 간 유착 · 유관단체와 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투명한 인사 기준 · 과도한 계급 	

○ 경찰부패는 人事 및 交通·防犯分野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있음

- 派出所와 관내업소간 뿌리깊은 癒着非理가 지속
- 摘發中心의 交通團束은 결과적으로 금품제공 기회를 증대
 - * 운전자의 63.5%가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27.1%에 불과('98년 설문조사결과)
- 인사철마다 인사권자의 裁量權 濫用, 人事請託 등에 대한 불만과 잡음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부패에 대한 경찰관 설문조사결과 ('99.4, 3개복수답변) :
인사비리 53.1%, 부족경비 충당 부조리 51.2%, 교통분야 32.3%

○ 전체적으로 個人的 次元의 腐敗는 줄어들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여건, 운영경비 부족 등 제도·행정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慣行化된 腐敗는 아직도 온존

- 2교대제·전일제 파출소가 84%(일평균 12~14시간 근무)

나. 改善對策

◇ 交通團束을 指導中心으로 轉換하고 團束의 透明性 提高

- 적발위주의 교통단속을 指導와 交通疏通 중심으로 전환
 -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이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處罰보다는 事前指導를 강화
 - 過速團束은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豫告團束을 실시하고 시내 등 교통혼잡지역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소화
 - 飲酒測定器, 無人團束 카메라를 확대하여 지도단속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현재 174대의 무인단속기 운영)
 - 道路交通安全管理公團 등이 단속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적발시 범칙금의 일정비율을 시설설치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방안 검토
 - 교통사고 조사시 반드시 被害者 家族이 입회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는 事故當事者에게 알려주어 사고처리의 透明性을 제고
 - 중점단속행위에 대한 告發 및 교통사고 提報·目擊者에 대한 補償 強化
 - 단순한 物的被害 交通事故에 대하여는 刑事責任 免責基準을 上向 調整(현행 80만원 미만 ⇒ 200만원 미만)
- * 단순 물적피해만 유발한 교통사고 현황 : 80만원미만 70%, 80만원 이상 30% ('98년 1~11월 중 서울, 인천지역 4개 경찰서 기준)

◇ 癒着非理 防止를 위해 派出所를 縮小하고 團束節次 改善

○ 대도시 지역 派出所는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여 警察署 集中 巡察體制로 전환

- 파출소 감축에 따라 남는 인력과 예산은 민생치안 분야를 보장하고 근무여건 개선

* 동단위지역 파출소 감축시 조정인력·예산('99.3기준) : 인력 23천명, 인건비 3천억원, 운영비(1,700개소) 500억원

○ 遊興酒店을 제외한 接客業所에 대한 경찰의 職權團束을 금지

- 犯罪申告時 또는 官署長 事前決裁下에 풍속위반사범 단속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

- 단속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警察·市民團體로 구성된 「民官合同團束」 실시

◇ 市民의 監視를 強化하기 위해 「警察行政 市民評價團」 運營

○ 辯護士, 敎授, 市民團體代表 등을 위원으로 임명, 경찰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경찰청장 또는 반부패특별위원회에 통보

※ 유착폐해 가능성이 높은 警察有關團體는 廢止

◇ 人事非理를 豫防하기 위하여 昇進·轉補의 透明性を 提高

○ 객관적인 地域 및 部署의 轉補基準 마련·시행

- '轉補圈域'을 구분하여 특정권역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타권역으로 전보하고 전보경합시 근무성적순으로 결정

* 현재 통일된 전보 기준없이 관서별, 기능별 자체 지침하에 운영

○ 公正하고 合理的인 審査昇進基準 마련·시행

- 승진심사시 인사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허용하는 指揮官 推薦點數(10%), 適性(8%) 비율을 하향 조정
- 勤務成績(30%)의 비중을 높이고, 등급간의 격차를 확대하여 평상시 성실히 근무하는 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

○ 誠實하고 資格있는 경찰관에 대하여는 勤續自動昇進 범위를 현행 警査에서 警衛까지 확대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제고하고 승진비리를 축소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勤續自動昇進制를 근무실적, 징계 등을 참작하여 자동승진 소요기간을 차등적으로 운용

* 현행 자동근속승진 소요기간 : 순경(7년)→경장(8년)→경사

◇ 癒着誘惑을 防止하기 위해 勤務與件을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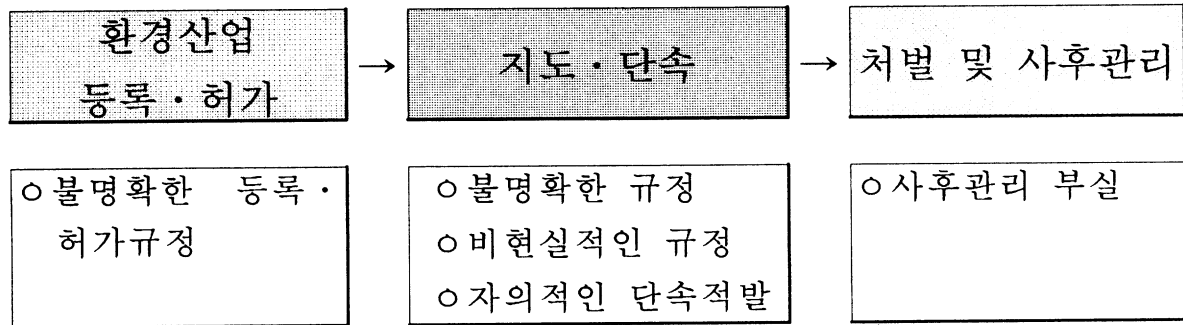
○ 2교대, 전일근무(형사, 교통외근부서 등) 관행을 3交代 勤務로 轉換

○ 外勤 活動費, 組織運營費, 時間外 勤務手當을 현실화

※ 파출소 감축에 따른 조정인력·예산을 활용

環境分野

가. 腐敗實態 및 原因



○ 환경분야 비리는 규제개혁 및 감시강화 등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許可, 指導團束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발생

- 금품제공은 불법사실 默認, 등록·허가시는 急行料 성격으로 대부분 일선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설문결과('99.1) 환경업체 종사자의 21.4%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금품은 주로 단속과정에서 제공한다고 응답

○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不明確하거나 非現實적인 규정과 지도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裁量이 과도하기 때문

* 不明確하거나 非現實적인 規定 事例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오염물질(BOD) 처리용량이 충분함에도 동처리구역내에 위치한 사업장의 BOD 배출허용기준을 120 mg/ℓ 로 일괄규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기준은 BOD 150-240mg/ℓ 임)

*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질의 : '96년 5,494건→ '98년 6,530건(18.9%증)

나. 改善對策

◇ 非現實的인 規制를 緩和하고 執行基準을 明確化

○ 비현실적인 規制基準을 합리적으로 개선

- * 대상규정 예시) 하수종말처리구역내 사업장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등

○ 行政節次 간소화 및 事前規制 완화

- * 대상규정 예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신고제로 일원화

◇ 指導團束 節次 透明化

○ 과거 단속현황, 범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團束對象·團束回數를 객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任意的인 團束 防止

○ 단속시 團束目的, 團束事項, 團束者 身分을 공개하고 적발 결과도 현장에서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통보

- 단속공무원은 의무적으로 日日業務日誌(방문업소명, 적발사항, 조치사항 등)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에서 불시 확인

○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 굴뚝에 汚染物質 自動測定器機를 부착하고 電算網과 연계운영하여 24시간 상시감시 하므로써 현장 방문식 지도단속 지양

- 단속결과 조치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恣意的인 團束・處罰을 豫防하고 잘못된 조치, 조치불이행 등에 대하여 시민의 고발을 유도

- 環境專門家を 환경홈닥터로 위촉하여 환경시설을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하는 등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적발보다는 사전 지도를 강화

* 전체범위반사업자중 중소기업비율('98년) : 76% (5,141개)

◇ 不法行爲 告發, 指導團束에 市民參與 擴大

- 環境影響評價, 環境親和企業指定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의 결정과 주요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행정처분시 시민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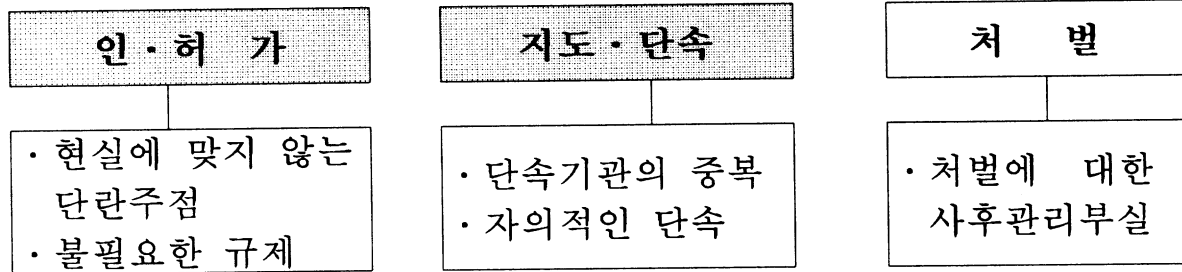
- 告發補償金額을 현행 1만원에서 5만원~10만원 또는 罰科金の 5~15%수준으로 인상하여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자 등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

- 단속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도 보상

* 현재는 일부 시군에서 전용전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인터넷을 개설하고 고발자에게 1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 ('98년도 7,652건 고발 103백만원 지급)

食品衛生分野

가. 腐敗實態 및 原因



○ 식품위생분야는 國民의 健康 및 風俗問題와 연결되어 있어 타 분야에 비해 규제가 많고 管理對象業所가 많아 부조리 유발요인으로 작용

- 衛生分野 부패는 단란주점을 중심으로 認 · 許可 및 단속 과정에서 주로 발생

* '99.1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단란주점 허가시 63%, 지도단속시 74%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키기 어려운 규제와 重複的이고 恣意的인 團束 등 지도단속의 透明性이 未洽하기 때문

※ 非現實的인 規制 事例

- 20세 미만의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칸막이 및 조명기준
- 일반음식점에서의 대중예술인 공연 금지

- 警察은 犯罪諜報 蒐集 등을 이유로 수시로 업소를 출입하면서 시설기준 등 풍속이외의 사항도 점검

* 단란주점 1개업소당 연간 평균단속횟수('98 실적) : 6회

나. 改善對策

◇ 단란주점의 不法營業 團束強化를 통해 業種轉換 誘導

- 新規許可는 엄격하게 제한 (장기적으로 접객업소 업종개편 검토)
- 관계기관 合同團束을 통해 단란주점의 탈법행위 근절
 - 상업지역내 업소는 접대부고용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特別消費稅를 부과하여 遊興酒店으로 轉換 誘導
 - 주택지역내 업소에 대해서는 接待婦雇用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노래방 등으로 轉換 誘導

* 24천개 단란주점중 주택가 주변에 10천개 업소(41%)가 영업중

◇ 食品接客業所에 대한 任意的인 團束은 嚴格하게 制限

- 경찰은 풍속위반사범 단속 및 범죄신고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업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警察官風俗團束指針」 제정운용
- 名譽食品監視員(2,742명), 市民・社會團體 등과의 합동단속 활성화

◇ 市民參與 및 情報公開 등을 통해 團束節次를 透明化

- 단속결과 조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恣意的인 團束·處罰을 예방하고 조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시민 또는 경쟁사업자가 監視·告發할 수 있도록 함
- 「1399 住民申告 및 補償制度」운영을 활성화
 - 불법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에 대한 補償金을 상향조정 (현행 2-10만원 → 5-30만원)
- 「團束實名制」를 도입하여 단속목적, 단속사항, 단속자 신분을 공개하고 적발결과도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현장에서 통보

◇ 不條理 誘發要因을 除去하기 위한 制度改善을 強化

- 不合理的 規制 廢止
 - 유흥주점 등에 대한 靑少年 雇用 및 出入年齡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 ('99.7.1 기시행)
 - 가수 등 大衆藝術人의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공연 허용
 - 단란주점의 칸막이 및 조명규제 폐지 검토
 - 식품의 衛生基準은 강화하되 品質基準은 권장사항으로 전환
- 營業許可를 申告制로 改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중)

